

한우값 급락, 거래감소 등 육우시장 불확실성 지원 나서

육우용 입식농가 마리당 5만원 지원
암컷 제외 수컷 송아지로 제한해
우유·육우자조금 총 1만마리 대상

한우가격 하락 여파로 육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축산농가 육우 입식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축산농가가 젖소 수컷 송아지를 육우용으로 입식하면 우유자조금과 육우자조금을 통해 마리당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젖소송아지는 성별에 따라 사육하는 농가에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송아지는 미래의 착유에 필요하므로 주로 낙농가가 기르지만, 수컷 송아지는 착유가 불가능해 고기용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



오는 22일 네팔로 운송될 예정인 젖소가 경기도 화성 소재 검역시행장 입소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이유로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젖소와 육우를 함께 기르는 낙농가나 육우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한우와 육우를 함께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기르게 된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대부분 초유때

기(생후 1주일), 분유떼기(생후 2개월)에 거래되며 낙농가가 송아지를 판매하면 이는 낙농가의 수입으로 잡히며 우유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는 지난해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한 육우가격의 동반 하락과 군급식 공급 감소 등으로 육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감소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을 줄이자 거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또한 하락했다. 낙농가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 감소로 인해 낙농가들은 송아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육우산업은 생산기반 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순 생후 2개월 기준 젖소 송아지 산지 가격

은 암컷은 12만2000원, 수컷은 26만원으로, 각각 평년 산지 가격(암컷 46만 1000원, 수컷 79만4000원)의 3~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번 입식 지원은 우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암컷 송아지를 제외한 수컷 송아지로 제한했으며 우유자조금이 3월에 5000마리를, 육우자조금이 4월에 5000마리를 총 1만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입식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관할기관인 지역 축협에 지원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한 이후 이력번호 이관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3월 6일부터 1주일이며, 신청량이 적으면 신청서 제출 기간을 연장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올 구직수당 최대 540만원으로 상향

고용부, 지역 특색 맞춰 집중홍보
사회초년생 등 월50만원 6개월지원
70세이상 등 부양가족당 10만원 ↑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청년, 저소득 구직자 등에 주는 구직수당이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한다. 2021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총 7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 까지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540만원으로 상향됐다.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에서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생계지원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제공
- 월 50만원 × 6개월
-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 고령자(만 70세 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장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
-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참여 조건

- I 유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II 유형
- 특정계층: 소득 무관
- 18~34세: 소득무관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공통) 재산 무관

자료/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한도는 월 40만 원이다.

고용부는 이달 홍보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제도의 소개, 참여 후기 등을 담은 콘텐츠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노트북 등 상품을 준다.

오는 13~24일 전국 대형마트, 운전면

허시험장 등에서 '커피차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온라인에서는 친구추천 이벤트, 조성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전국 고용센터에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춰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대학교 온·오프라인 설명회, 군부대 방문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고용·산재보험 미신고시 300만원 과태료

근로복지공단,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 건설·벌목업 보험료신고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세종=원승일 기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지난해 보수총액신고를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목적이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돼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건설·벌목 등 고용·산재보험 자진 신고 사업장의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건설·벌목업도 이 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우즈벡 수입 가전제품 '차별 규제' 개정 합의… 기업 애로 해소



300억원 규모 가전제품 수출 정상화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갑작스러운 수입 규제에 정부가 즉시 대응해 연간 300억원 규모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 협상을 벌였고, 삼성과 LG전자 등 연간 300억원 규모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고 5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앞서 지난 12월 3일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가 사전 통보는 물론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우즈베키스탄이 발표한 규제 강화 내용은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기준 'D등급 이하'에서 'B등급 이하'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국표원은 현지 내수 제품의 경우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금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규제가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은 이달 1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양자 협상에 돌입, 우즈베키스탄 측에 수입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

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해당 규제에 대한 개정 절차에 착수했고,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돼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됐다.

국표원은 아울러 2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을 방문해 WTO(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도 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국표원은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제5차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협력사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협력사업으로는 농어업인의 중·고등 학생 자녀 대상 뉴질랜드 어학연수, 농수산 분야 고교·대학 재학생·졸업생 대상 뉴질랜드 직무교육·현장실습, 농수산 분야 공무원 연구 지원 등이 있다.

협력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 간 인원과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대면으

로 진행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협력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의 경우 지난해 뉴질랜드 교사를 국내에 초청해 축소 진행한 반면,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과 안전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뉴질랜드 현지에서 추진키로 했다.

훈련 연수는 뉴질랜드의 농림수산분야 우수 기관과 협력해 진행키로 했고, 전문가 훈련은 동식물위생검역·수산자원관리·산림복재 분야의 뉴질랜드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약정이 내년 3월 종료되므로, 향후에도 협력사업의 안정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약정을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